

# 자율관리어업

##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9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7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박재영 ■ 기사·편집 : 경영본부장 최광림

### 올해 공동체 어업분쟁 신규과제 발굴

올해 공동체 분쟁해소를 위한 신규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한국수산업회는 분쟁조정위원으로 현지조사단을 편성, 오는 3월 중순까지 한달여 동안 분쟁과제 발굴에 나섰다.

현지조사단은 이 기간동안 자율관리 공동체 등을 방문, 어업인간, 지역간 및 업종간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발굴해 해소방안 마련에 나선다.

한국수산업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율조정협의회에서는 지난 2004년

부터 총 61건의 신규 분쟁과제를 발굴, 이 중 41건을 조정 완료함으로써 어촌사회의 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체적인 분쟁사례 발굴 이외에도 어업인들이 분쟁해결을 요청하면 한국수산업회 분쟁조정위원들이 공동체 및 어업현장을 직접 방문,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비용은 무료이다.

문의처 : 한국수산업회 자율관리팀 (02-589-4604).

### 연안바다목장 올해 4곳 신규 조성 강원 삼척, 충남 보령·태안 등 ... 190억원 투입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연안바다목장 4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어초 투하 모습.

해양수산부가 올해 19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들여 연안바다목장 4개소를 신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안 어장의 수산자원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신규로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 △충남 태안군 안면도 및 원북면 등 총 4개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목장 조성 과정에서 어촌계 등의 의견을 수렴, 바다목장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형적 특성에 맞는 인공어초, 자연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한편 동해의 경우 가자미와 문어, 서해의 경우 주꾸미와 전복 등 지역특화 어종을 선정해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목장 조성해역을 중심으로 연 4회 모니터링 조사를 시행하고 일정기간 어업활동을 제한해 바다목장 조성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 연안에 바다목장 50개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1개소(동해 6개소, 서해 8개소, 남해 5개소, 제주 2개소)를 완공했다.

### 자율관리공동체 내수면평가협의체 회의

#### 2월 하순경 내수면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한국수산업회는 2월 하순경 자율관리어업 내수면평가협의체 회의를 가진다.

내수면평가협의체 회의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내수면공동체에 대한 평가 중 기존 수협평가를 내수면평가협의체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수면공동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평가한 공동체 활동실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협의체에서 평가한 결과를 전산평가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내수면평가는 △자율관리어업 추진정도 △대외활동 및 주변파급 효과 △위원장 리더십 및 회원결속력 등 각 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가 없는 공동체는 활동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평가항목별 최하 점수를 받게 된다.

내수면평가협의체는 해양수산부와 수산단체, 대학교수 등 5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 한국수산업회, 자율관리어업 지역담당 컨설턴트 공모

인천경기, 경북, 경남서부 등 3개 지역

한국수산업회는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담당 컨설턴트를 공모중에 있다. 모집지역은 인천·경기, 경북, 경남서부 등 3개 지역으로, 컨설턴트 결원에 따른 것이다. 모집 인원은 지역별 각 1명씩이다.

한국수산업회는 이들 지역의 컨설턴트를 2월 중 위촉하여 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 제주도, 종달어촌계 마을어업 경영평가 최우수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종달어촌계를 최우수 어촌계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어촌계 마을어업 경영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어촌계 외에 제주시 도두어촌계를 우수 어촌계로 선정했다.

종달어촌계에는 부상으로 1억원, 도두어촌계에는 5000만원 상당의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도내 10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마을어업 생산통계 관리, 소라 TAC(총어획량) 제도 준수, 양식어장 관리, 신규해녀 가입, 해녀안전사고 예방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을 놓고 평가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마을어업 경영평가를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12개 어촌계가 선정돼 9억원을 지원받았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바다! 살맛나는 바다!

## 한국수산업회에 설치된 “자율조정협의회” 어업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 ■ 조정목적

-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업종간 발생하는 문제와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조정

#### ■ 조정대상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간 분쟁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와 미가입어촌계간 분쟁 등

#### ■ 조정절차

- 분쟁조정 신청 → 분쟁대상 현지 실태조사 → 분쟁조정 과제 선정 → 과제별 조정 실시 → 사후관리



#### ■ 분쟁조정 사례

- 진도 가사어촌계(가사1,2,3구)간 지선경계선 획정 분쟁(2015)
- 부안 진리어촌계와 벌금어촌계간 관할구역 분쟁(2015)
- 경북 포항 연안연승어업협회와 자망어업협회간 조업분쟁(2015)
- 완도 노화 내리 공동체와 마안도 어업인간 양식어장 분쟁(2014)
- 진도 신전공동체와 죽향도 어업인간 어촌계 분할분쟁(2014)
- 당진 장고항 공동체와 화성 국화도 공동체간 연안어업 조업구역 분쟁(2014)
- 후포·강구 자망협회와 구룡포·감포 통발어업자간 분쟁(2014)
- 강화군 구획어업 조업구역 분쟁(2014)

※분쟁조정비용은 무료임.

올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맞춤형 컨설팅 활성화 ... 공동체 질적성장 추구  
권역별 우수공동체 경진대회, 집합식 컨설팅도 추진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산회와 수협중앙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공동체 어업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중 역점사업은 한국수산회의 경우 △교육 및 홍보사업 △자율조정협의회 운영 △공동체 평가위원회 사무국 운영 △공동체 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트 운영 △우수공동체 해외연수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다.

또 수협중앙회는 △자율관리공동체 선진화 교육 △자율관리어업 교육 사업 활성화 워크숍 △성공사례 전수 현장교육 등 교육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한국수산회의 공동체 교육 및 홍보 사업은 매년 신규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직접 방문, 구성원에 대한 집합교육 및 우수공동체 현장방문 교육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또 자율관리 참여공동체를 대상으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율관리어업 추진방향을 공동체의 질적 성장에 두고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 경진대회를 가져 입상 공동체에 상금 및 지정패를 수여하는 '우수공동체 경진대회'도 권역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대상 공동체는 전년도 평가점수 600점 이상 공동체로, 권역별로 5개를 지자체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율조정협의회는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업종간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민간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

서해어업관리단, 기초 지자체 및 수산사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분쟁해소의 효과를 보다 높여 나갈 방침이다.

컨설턴트 운영사업은 컨설턴트를 활용해 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공동체 및 미참여 어촌계를 우선 대상으로 시도별 컨설턴트를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분야 컨설팅은 종전의 현장방

문 컨설팅과 함께 올해부터는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에서 관심있는 분야를 사전 조사하여, 관계전문가를 초청해 집합교육 형태의 강의식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집합식 컨설팅은 우수공동체 경진대회 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수공동체에 대한 해외연수는 올해 3회 45명 내외의 공동체 지도자 및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우수공동체 2회, 신규공동체 1회로 추진된다.

이밖에 자율관리어업 소식지 등을 발간, 자율관리 정책소개 및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수산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수산자원 보전 관리를 위한 어업인 인식전환 등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어업인들의 어로활동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외에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잠도어촌계  
진해만 키조개 양식 기술개발 '맞손'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와 진해 잠도어촌계가 협약을 맺고, 진해만 키조개양식 기술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마산사무소)와 잠도어촌계가 지난 1월25일 창원시 진해구 잠도 어촌계회관에서 '진해만 키조개 양식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연구어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수산기술사업소

(마산사무소)와 잠도어촌계는 진해만에 서식하는 자연산 어린 키조개의 이식을 통한 양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3년동안 함께 연구어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연구어업은 해양수산부의 어업인 개발과제로 선정돼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시하게 되며, 진해만에 서식하는 자연산 키조개의 종패 이식을 통한 단위면적당 적정 양식가능 마리수 산출과, 양식 가능성 확인 및 경제성을 분석하게 된다.

경북도 어업기술센터, '수산인력 양성사업자 모집'

경북도 어업기술센터는 2월29일까지 수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자를 모집한다. 어업인 후계자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어업을 경영한 지 10년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업 경영인은 55세 이하로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선도 우수 경영

인은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5년, 전업 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이면 된다.

주요 사업은 어선 구입과 개량 및 보수, 장비 구입, 양식장 신축, 수산물 저장 및 판매 시설 설치 등이다. 연 2% 금리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인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통영수협 어촌계장 협의회장 이취임식



통영수협(조합장 김덕철)은 지난 1월20일 통영 엔초비호텔에서 제6대

노정오 어촌계 협의회장 이임식과 제7대 김석기 어촌계장 협의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덕철 통영수협 조합장을 비롯, 이군현 국회의원, 어촌계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석기 어촌계장 협의회장은 법송 어촌계장 출신으로 어촌계장 정기월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부안 위도 대리어촌계, 인재 양성 장학금 기탁

부안군 위도면 대리어촌계(어촌계장 김인배)가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이사장 김종규 부안군수)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해 지역인재 양성에 동참했다.

위도면에 위치한 대리어촌계는 대리소리·전막·거륜 등 4개 마을 어업인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고성군 거진연승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이취임식



강원도 고성군 거진연승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이취임식이 지난 1월 29일 거진복지회관에서 윤승근 군수, 김형실 군의장 등 기관 단체장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함용수 위원장이 이임하고 임영식 위원장이 취임했다.

특 별 기 고

# 자율관리어업, 협동조합으로 발전모델 만들자

2015년 한국수산회 자율관리어업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규모 또는 아주 초보단계에 있는 자율관리 공동체를 방문할 기회가 많아졌다. 이들 공동체의 공통점은 회원들이 저마다 생업에 충실하고는 있지만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근본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공동체 협동심 이끌어 내야

'새어촌운동'으로 출범 15년째를 맞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은 풀뿌리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인 회원들이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것은 바로 국가의 주요 수산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일선 어촌현장에 제대로 전파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필자가 자율관리공동체를 순회하면서 중점적으로 컨설팅하는 것은 공동체 회원들이 자율관리공동체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다.

바다자원은 가꾸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자율관리어업의 취지를 회원들의 잘 이해하고, 공동체의 리더인 위원장 또는 집행부의 지도를 잘 따라줄 때 공동체 발전을 위한 협동심과 단결력이 발휘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공동체 구성원간의 단합이 자율관리어업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방문할 때마다 협동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 공동체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동체 회원들의 협동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자율관리공동체는 협동운동체가



홍종민

자율관리어업 전북담당 컨설턴트

자 사업체이다. 따라서 자율관리공동체는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체를 협동조합의 가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협동조합은 기업처럼 시장경제 안에서 탄생해 성장해 온 사업형태이다.

### 사업성 겸비한 협동조합체로 전환

특정 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업 형태보다 효율성에서 더 특별한 이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덴마크 코펜하겐의 동쪽 앞 바다 5km 가량 나가면 거대한 풍력발전기 20대가 줄을 지어 바람을 날린다. 이 풍력발전기의 주인은 미들그룬텐이라 하는 발전협동조합이다. 정확하게는 발전소 건설자금을 출자한 8600여명의 코펜하겐 시민, 미들그룬텐 협동조합원들이다.

미들그룬텐은 40MW(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코펜하겐 전력 사용량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는 뉴질랜드를 농업 보조금이 없는 나라로 알고 있다. 농업을 온전히 시장에 맡겨 성공한 대표적인 벤치마킹 모델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거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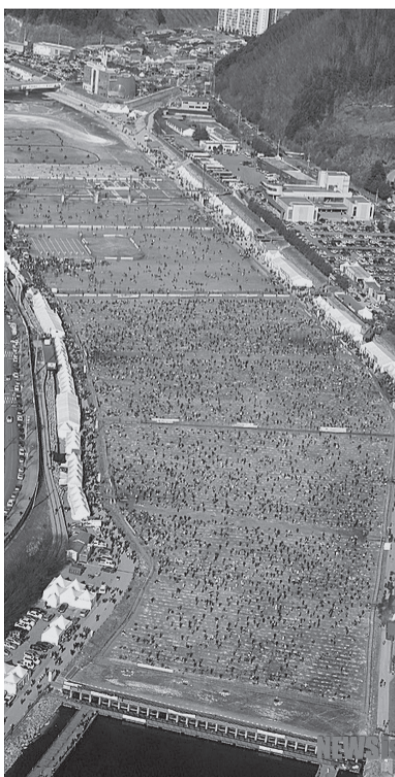
뉴질랜드는 보조금을 없애면서 협동조합에 수출 독점권이라는 특권 중의 특권을 부여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농업경제를 이끌어가는 최대기업 폰테라(낙농)와 제스프리(키위)는 협동조합이다.

리오넬 메시의 FC 바르셀로나, 미국 언론의 대표주자 AP통신, 캘리포니아 오렌지의 썬키스트, 프랑스 최대은행 크레디아그리콜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들 또한 협동조합이다.

자율관리어업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한국형 협동조합인 자율관리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2016 화천 산천어축제' 세계적 축제로 우뚝 ... 154만명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도 화천군에서 겨울 산천어축제를 만끽하고 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에서 지난 1월9일부터 열린 '2016 산천어축제'가 1월31일 막을 내렸다. 올해 방문객 수는 154만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



2016 화천 산천어축제에는 올해 154만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다. 축제가 처음 열린 2003년 20만명 수준에서 13년만에 방문객이 7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산천어 축제의 성공 비결은 무엇보다 방문객들이 쉽게, 많이 산천어를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꼽힌다.

화천군은 산천어 방류량을 꾸준히 늘렸다. 2014년 89톤에서 지난해 124톤, 올해엔 155톤을 풀었다. 산천어 집단 폐사 방지도도 힘썼다.

화천군은 산천어의 수온 적응을 돕는 5510㎡ 규모의 양식장을 화천군 하남면에 만들었다. 17곳의 양식장에서 6~8개월간 성장한 산천어를 축제 시작 일주일 전 이곳으로 옮겨 수

온 적응기를 거친 뒤 화천천에 풀어 놓았다. 산천어는 활기를 되찾았고 폐사량도 줄었다.

올해 산천어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화천 산천어축제는 해외 언론의 집중 조명도 받았다. 축제기간 동안 미국 CNN과 중국 CCTV를 비롯한 독일 프로지벤 방송, 프랑스 TV5, AP-EPA 등 해외 방송언론사들이 현장취재를 통해 세계 40개국에 581건을 보도했다. 특히 미국 CNN은 이번 주의 사진으로 산천어축제를 선정했



외국인들이 산천어낚시를 즐기고 있다.

고 일본 니혼 TV는 산천어얼음낚시 현장에서 생중계(1월27일)를, 말레이시아 무슬림 드라마 빔보 촬영, 외국인 파워블로거 방문 등 국내 축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해외 언론사들의 열띤 취재경쟁이 이어졌다.

해외 언론의 산천어축제에 대한 관심은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관광객 7만5000여명(지난해 5만2000여명)이 찾는 결과로 이어졌다.

차디찬 얼음장을 뚫고 낚시줄을 타고 올라오는 산천어의 펄떡임처럼 살아 있는 지방축제, 지방 고유의 자연과 문화를 조화시킨 수산물축제가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 작년 어촌체험마을 체험객 100만명 돌파

전년비 체험객 14%, 체험소득 21% 증가



지난해 어촌체험마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어촌체험마을을 찾은 국민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전국 106개 어촌체험마을 체험객이 100만 5702명, 체험 소득은 총 270억 52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마을당 평균 관광객 1만여명을 유치해 평균 소득 3억여원을 올린 셈이다. 2014년(88만명, 224억원)과 비교하면 체험객과 체험소득이 각각 14%, 21% 증가했다.

지역별 방문객은 수도권이 28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23만명)와 강원도(13만명)가 그 뒤를 이었다.

특색 있는 체험, 어촌을 배경으로 한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 힘입어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경기 침체에도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해수부는 분석했다.

또 해수부는 지난해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어촌체험마을과 기업·학교 자매결연 등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다.

해수부는 2001년부터 전국 각지에 어촌체험마을을 선정해 관광안내소, 체험장,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등 기반시설 운영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올해 총허용어획량, 작년 86% 설정

11개 어종 TAC 전년비 5만3520톤 줄어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과도하게 책정된 TAC 물량을 현실성 있게 운용키로 하고 올해 TAC 물량을 전년보다 감소해 책정했다.

올해 TAC(총허용어획량)가 지난해 대비 5만3520톤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TAC 대상어종인 11개 어종의 TAC를 지난해의 86.4% 수준인 33만8827톤으로 확정했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12만2000톤 △전갱이 1만6600톤 △붉은대게 3만8000톤(2000톤 감소) △키조개 5332톤(1133톤 감소) △대게 1194톤(389톤 감소) △꽃게 6000톤(4900톤 감소) △오징어 14만1750톤(4만4250톤 감소) △도루묵 4329톤(821톤 감소) △개조개 1800톤(200톤 감소) △참홍어 180톤(40톤 감소) △제주소라 1642톤(213톤 증가) 등이다.

이번 TAC의 감축은 그동안 TAC가 과도하게 배정돼 자원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수부는 향후 TAC를 실어획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수산자원평가와 조업실적을 토대로 우선 오징어의 총허용어획량을 최근 실질 어획량의 95% 수준으로 감축했다.

또한 향후 타 어종들도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실제 어획량 이하 수준으로 축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어획량보고제도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미보고, 미배정' 원칙에 따라 어획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TAC를 배정하지 않고 어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TAC어종을 어획하는 TAC 미참여 업종의 어획보고를 자율적으로 유도해 향후 TAC대상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업종이 TAC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해수부, “바다 사막화 막자”

올해 347억원 투자해 바다숲 3064ha 조성



해양수산부는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전국 연안에 대대적인 바다숲 조성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사진은 인공어초를 이용해 바다숲을 조성하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가 바다사막화를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수부는 갯녹음(바다사막화)이 심하게 진행된 해역을 대상으로 연안생태계 복원을 위해 총 347억원을 투자, 여의도 면적의 10.5배에 달하는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바다 숲을 조성하는 지역은 강원 4개소, 경북 8개소, 울산 1개소, 부산 2개소, 충남 1개소, 전남 2개소, 경남 1개소, 제주 4개소, 서귀포 1개소 등 24개소로 조성 면적은 3064ha다.

바다 숲 조성사업은 바다사막화로

불리는 '갯녹음' 발생 어장에 해조류를 옮겨 심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09년부터 황폐해진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국 연안에 '바다숲' 5만4000ha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7년간 87개소를 대상으로 약 9145ha를 조성했다.

바다숲 조성사업과 함께 고효율 바다숲 조성 기술개발과 조성지역의 생물 다양성 증대를 위해 신제품개발도 추진한다.

## 양식시설 철거 의무기간 연장

종전 60일에서 최장 90일로 늘려

### 어업면허 관리규칙 개정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기간이 60일에서 최장 90일까지로 대폭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양식면허 및 허가가 종료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시설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고 기상악화나 철거

장비 부족 등으로 철거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장기간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철거하지 못할 경우 최고 70만원의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1회에 한해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철거 의무기간이 90일로 늘어나 철거 지연으로 인한 어업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내수면 잠수기 사용 허가지역 관련 제도개선

해양수산부는 내수면에서 잠수기를 이용해 패류채취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지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잠수기는 잠수부가 어선에서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갈퀴 등을 사용해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때 사용하는 어구다.

그동안 내수면에서 잠수기를 이용해 패류채취어업을 하는 지역과 패류 종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해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고시한 경남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의 섬진강 일원에서 '갈퀴'를

대상으로만 잠수기를 이용해 패류채취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양수산 분야 현장중심 규제개혁 일환으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수지역은 해수부장관이 고시하고 담수지역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해수부는 잠수기 사용 허가지역을 '섬진강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구간 중 기수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중국어선 EEZ 입어희망 소폭 감소

4개 업종 1502척 조업 신청 ... 전년비 4% 줄어



올해 우리측 EEZ 내 입어를 희망한 중국어선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올릉도 연안의 중국어선 모습.

### 재입어 비율은 61%

올해 우리측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입어를 희망한 중국어선은 모두 1502척으로, 지난해 1564척에 비해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어선에 대한 어획할당량도 5만4603톤으로 지난해(5만9996톤) 보다 약 9% 감소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조업에 나서는 우조(오징어채낚기)어업 등 아직 입어신청을 하지 않은 일부 어선을 감안하면 올해 어업허가증 발급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측 EEZ에서 조업했던 중국어선 중 61%(911척)가 올해도 다시 입어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우리 EEZ에서 불법어업으로 나포돼 입어자격을 상실한 어선(558척)을 제외한 대부분 어선이 우리 수역에 다시 입어를 신청한 결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중국어선 입어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조기, 삼치, 갈치를 주로 어획하는 타망(저인망)어업이 50%, 조기를 주로 어획하는 유망(자망)어업이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요녕성이 38%로 가장

많은데 이어 산둥성 26%, 절강성 20% 순으로 이들 3성 어선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요녕성은 자망과 타망, 산둥성은 타망, 절강성은 타망과 자망어업이 주 업종으로 확인됐다.

어선규모는 타망어업은 평균 150톤(선박 길이 33m, 선원 14명), 유망어업은 78톤(24m, 14명), 위망어업은 220톤(36m, 15명)으로, 우리의 저인망, 자망, 선망어선 규모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요녕성, 산둥성, 절강성 지역의 타망 및 유망어선들의 입어가 많은 것은 우리 수역 입어 희망 수요, 어선세력, 어업 의존도,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에서 이들 지역에 어획량을 많이 배정해 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우리측 EEZ내에서 어업활동이 많은 요녕, 산둥, 절강성 지역의 타망 및 유망어선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들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담보금 인상, 몰수 및 폐선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양국간 합의사항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관 주재, 민관 합동 ‘수산물 수출’ 대책회의 개최

수출 애로사항 발굴 ... 현장 점검. 지원반도 운영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2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수산물 수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물 수출 품목별 업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석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수산물 수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 1월 수산물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4% 감소한 것에 대한 위기상황을 수산업계가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1월 수산물 수출실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회요인을 잘 살리면 수산물 수출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며 중국시장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등 할랄시장 진출에 업계의 관심을 요청했다.

회의에는 참치, 김, 굴 등 주요 수출 품목별 수출

전망과 확대방안 등을 발표하고, 수출 애로사항의 발굴해소를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대책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산물 수출의 조기 반등을 위해 ‘수산물 수출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정례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수출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또 품목별 ‘현장 점검·지원반도’ 함께 운영해 수산물 수출 현장 목소리를 정부의 수출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해수부, 수산물 수출확대에 총력

올해 233억 투입, 관련 예산 전년비 57% 늘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수산물 수출확대가 수산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관련 사업에 올 한 해동안 지난해보다 무려 57% 늘어난 23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출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수요자 맞춤형 신상품 개발, 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김과 어묵의 수출 성공사례를 바

탕으로 ‘상품화 및 생산 → 통관 및 물류 → 홍보 및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수출 지원대책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세계경기 침체와 엔화 약세 등에 따라 지난해 수산물 수출은 19억2524만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6.9% 감소했으나 김과 굴은 각각 11.3%, 44.8%나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다.

## ‘귀어귀촌종합센터’ 서울로 이전해 개소

2월16일 어촌어항협회에서 개소식 ... 귀어·귀촌 정보제공, 종합상담 등 지원

제2의 인생을 어촌에서 시작하려는 도시민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서울에 문을 열었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10월 부산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문을 연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서울로 이전해 2월 16일 한국어촌어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운영하는 귀어귀촌종합센터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준비 절차와 관련 정책 안내 및 수산업 분야별 경영정보 제공 등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1년 2개월간 총 2477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114명이



‘귀어귀촌종합센터’가 한국어촌어항협회내에서 마련돼 지난 2월16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실제 귀어(歸漁)했다.

이번 서울 센터 개소로 기존에 센터가 있던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는 귀어·귀촌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에서

는 귀어·귀촌 상담과 홍보 및 관련 업무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귀어·귀촌 희망자들은 평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상담과 전화상담(1899-9597)이 가능하며, 센터 홈페이지(www.sealife.go.kr)에서도 교육정보, 우수사례, 수산기술정보 등 귀어·귀촌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과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귀어·귀촌 1가구 당 최대 3억 5천만 원을 2%의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분들은 2월 29일까지 가까운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기반 구축 추진

## 제도 시행이후 40년만에 첫 시도

### 수산자원 산란장·서식지 보호 목적 ... 해면·내수면 합쳐 30곳에 3161km<sup>2</sup> 지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산업화와 연안개발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수산자원의 산란장과 서식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5년 처음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말 현재 해수면과 내수면을 합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모두 3161km<sup>2</sup>로, 이 가운데 수면이 전체의 87%인 2760km<sup>2</sup>, 토지가 401km<sup>2</sup>이다.

이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되며, 불가피한 일부 개발 행위는 관리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어업행위는 지난 2014년말 현재 해수면을 이용한 어업권이 약 6500건(10만 2000ha), 내수면이 1085건에 이른다. 이들 보호구역의 수질환경은 해수면의 경우 하절기에 충남 천수만(2등급)과 전남 여주만(3등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4등급(나쁨) 이하 상태이며, 내수면은 대체로 보통 이상(3등급)의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면의 경우에도 동절기에는 2등급(좋음)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수면 및 내수면 지역의 퇴적물 환경은 현재 수산생물의 서식 및 생태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산란장 및 서식지 보호를 목적으로 1975년 처음으로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40년만에 종합적으로 조사해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계 유지에 적합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과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그동안 수산자원 분포나 지역 여건 등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산과학원 주관으로 올해부터 향후 3년간에 걸쳐 모두 22억 1300만원을 투입,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기초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정밀 분석한 후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경남 및 충남지역의 해수면 5개소(△천수만 △진동만 △한산만 △남해-통영1, 2)와 내수면 9개소(△나주호 △영산호 △보성호(이상 전남) △옥정호(전북) △안동호 △오십천 △왕피천(이상 경북) △남대천 △동강(이상 강원))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남의 득량만 등 나머지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영역별 목표, 구체적인 관리기준 및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축적된 자료는 지자체 및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 관리도면 제작 등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주요 조사내용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주변 여건, 수질 및 저질환경, 수산자원 분포 등과 같은 기초환경을 조사하고 이를 관리도면으로 제작한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영역별 수질 및 수산자원 등에 대한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관리기준 및 평가방안을 마련한다. 즉 수서 및 저서 생태환경에 대한 관리지표를 선정하고, 생태환경에 기반을 둔 평가방법 및 관리기준을 설정한다.

나아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환경 분석자료, 수산자원 분포 등을 통합적으로 상시 관리하는 종합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보호구역에 대한 수산자원 및 환경조사 결과, 관리목표 및 관리기준 등과 연계, 보호구역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해양수산부, 새해 업무계획 발표

##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 문호 개방 ... 근해어선 정부직권 감척 본격화

양식산업의 규모화가 본격 추진되는 한편 수산물 위생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직권 감척사업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수산부문의 경우 지난 1월14일 관련부처 합동 업무보고 당시 보고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정책이 발표됐다.

△양식산업의 규모화 = 양식면허에 대한 심사평가제를 도입, 부실 양식어장을 정비하고 어촌계 소유 양식면허에 어업회사법인의 참여를 허용, 외부자본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메기 등 내수면 어종의 생산 확대와 유통을 위해 충북 괴산에 대규모



해양수산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양식산업의 규모화 및 연근해어업 기반 구축 등 주요 수산시책을 발표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연내 완료하는 한편 오는 2018년말까지 200억원을 투입, 전문 유통판매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 패류 생산해역의 위생조사 빈도 및 항목 등 관리기준을 재정비하고, 생산해역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조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

또한 수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력제의 중점관리 품목을 12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수산물 인증제도를 '우수수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이밖에 홈쇼핑, G마켓 등 판매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와 정

보공개 의무화도 추진한다.

△연근해어업 기반 구축 = 트롤어선 등 자원남획 가능성이 높은 어선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직권으로 매입해 폐기하는 직권감척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와 관련, 오는 2023년말까지 근해어선 174척을 감척하되, 이 가운데 119척을 정부직권으로 감척한다. 이와 함께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년 범위(기존 1년)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유효기간(5년)만료시 상습 불법어업자는 퇴출하고 수산기술자 등에 대해 신규 허가를 발급하는 등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또한 연간 3000여억원에 달하는 폐어구에 의한 어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구인증제, 어구 및 폐어구 신고제 등을 도입, 어구를 생산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 멍게에서 시린이 치료소재 개발 성공

국내시장 710억원 규모로 전량 수입 ... 시린이 치료비 부담 ↓

해양수산부는 멍게에서 시린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멍게는 바다 속에서 염분과 조류 등에도 수시간 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물속에서도 상처 난 조직을 잘 붙일 수 있는 접착 물질 때문이다.

해수부 '해양섬유복합소재 및 바이오플라스틱 소재기술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한 황동수 포스텍 교수팀은 이 같은 멍게의 상처회복 메커니즘을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시린이 치료소재를 개발해냈다.

그동안 시린이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칼륨 이온이 포함된 치약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증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과 노출된 치아 하단부를 코

팅해 외부자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레진 도포법 등이 있다.

그러나 치약은 통증완화 효과가 일시적이고 다수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 레진 도포법도 칫솔질이나 음식 섭취과정에서 코팅이 벗겨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치료소재는 멍게의 혈액에서 추출한 갈산(gallic acid)을 이용, 기존 소재보다 생체 안전성이 높고 보다 빠른 시간에 치료가 가능하며 가격경쟁력도 우수하다.

연구팀은 치과용 재료 벤처기업 베리콤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연내 치과용 치료소재로 시판될 예정이며, 시린이 치료용 치약으로도 개발하기 위해 치약제조업체와의 기술이전도 협의 중이다.

## 해수부, 천수만 등 새조개 종묘발생장 사업 추진

허베이 유류피해지역 새조개 복원



서해안 겨울철 별미 '새조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충남 천수만 지역 등에 '새조개 어장복원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과 전남북지역에 대한 어장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새조개는 과거 남해안과 서해안 천수만 등에서 많은 양이 생산됐으나 현재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주로 생산되고 천수만 등 충남지역에서는 남획 등으로 소규모로만 생산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유류피해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품목으로 고부가가치 품종인 새조개 어장복원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실시했다.

이 결과 천수만 지역 등 주변지역 어장 환경이 현재 새조개가 주로 생산되고 있는 남해안의 여자만, 가막만, 진해만 지역의 퇴적환경이나 먹이환경 등과 유사해 새조개를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어장환경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새조개 어장복원을 위해 천수만 지역 등에 4억원을 투입해 새조개 종묘발생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2016년 양식어업 품종별 전망

## 어류·패류·해조류 등 전반적 생산량 증가 예상

올 한해 양식어업은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는 품목별 가격의 등락은 보이겠지만 전체적인 생산량은 어류와 패류, 해조류, 내수면 양식어종 등 대부분의 양식어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 한해 양식어업 품목별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는 올 한해 양식어업은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완도의 전복양식장 전경.

#### 김 생산 감소 ... 미역은 늘어날 듯

해조류양식어업은 김의 경우 소폭 감소하고 미역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김 생산량은 어기 초 작황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한데다 엘라노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해 대비 1% 가량 줄어든 1억2600만 여속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어기 초 수출증가, 재고감소 등 산지가격 상승요인이 많아 물김 산지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올해 우리나라 김 수출량은 5000만여속으로 전년 대비 1.3% 가량 줄어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역은 어기중반 이후 주생산지역의 생산량이 회복돼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42만5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지가격은 kg당 850~900원 수준으로 약보합세가 예상된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미역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3.0% 가량 늘어난 10만3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국별로는 북미와 기타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광어·우럭 생산량 모두 '증가'

어류 양식어업은 올해 광어와 우럭 모두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어는 지난해 입식량이 늘어난 상황으로 올해 생산량은 전년대비 3.2% 늘어난 4만1400톤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kg당 산지가격은 평균 1만900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간별로는 상반기에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하반기에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어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소비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량은 일본의 수요가 줄어들며 전년대비 12.7% 줄어든 2600톤 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럭은 생산량이 늘어나며 산지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우럭 생산량은 전년대비 5.7% 가량 늘어난 1만86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산지가격은 500g크기 1kg 기준 96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도 돔류와 농어는 전년대비 생산량이 늘어난고 가격은 소폭할 것으로 전망되며 송어는 전년대비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굴 가격 상승 ... 전복은 약세 예상

패류는 굴은 줄어드는 반면 전복과 홍합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굴 생산량은 전년보다 약 7% 감소한 3만2000톤으로, 산지가격은 kg당 6700~7000원 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산지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량은 전년대비 약 3% 줄어든 1만5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복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1만2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복 산지가격은 10미 기준 1kg당 3만5000~4만원 수준으로 낮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복 수출량은 전년대비 늘어난 1250톤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합 역시 생산량이 늘며 산지 활홍합 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홍합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 가량 늘어난 1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요는 전년과 비슷해 활홍합 산지 연 평균가격은 kg당 320~330원 수준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물동정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 2월12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양어장과 경기도 가평군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방문해 송어와 연어양식 연구에 힘써 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강준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2월4일 제주수산물연구회의실에서 넉치 대량 폐사 대응TF 성과보고회를 갖고 넉치 폐사 저감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류청로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 = 2월16일 어촌어항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귀어귀촌종합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2월4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해양수산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부산 해양수산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인사

■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전기정 <고위공무원 파견〉 △국방대학원(교육훈련) 파견 방대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훈련) 엄기두 △국립외교원(교육훈련) 이동재 <고위공무원 승진 및 파견〉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 이철조 <국장급 전보〉 △어업자원정책관 최원현 △해양산업정책관 최준욱 △해사안전국장 박광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조승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임현철 <과장급 파견〉 △통일교육원(교육훈련) 윤종호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 김현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상문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에 공노성씨



수협중앙회는 지도경제상임이사를 지낸 공노성(60·사진) 씨를 새 지도경제대표이사로 선출했다. 그는 2월16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수협 회원조합장 등 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

찬반투표에서 찬성 88표를 얻어 당선됐다.

공 신임 대표이사는 앞서 지도경제대표이사 후보자 1명을 결정하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자로 선정됐다.

경남 남해 출신인 공 대표이사는 부산수산대(현 부경대)에서 양식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에서 해양산업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하고서 유통, 가공 업무 부서장을 거쳐 경제사업 담당 상임이사를 두 차례 역임한 수협 내 '경제통'이다.

공 대표이사는 "올해 수협 사업구조개편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수협 본연의 역할인 수산물 유통과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지도경제사업부문을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임기는 2월16일부터 4년간이다.

제4회 바다식목일 개최지, 강원도 양양 선정  
5월10일 양양 수산항에서 개최

해양수산부는 제4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지로 강원도 양양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바다식목일은 매년 5월10일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 속에 바다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유치신청을 한 양양군 등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행사계획의 적정성·개최 여건·개최의지 등을 심사, 강원도 양양을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내 대표 미항인 수산항은 대규모 요트마리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지정어촌체험마을로 선정돼 배낚시와 투명카누, 스노클링, 해산물 요리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

한수총, 수협법 개정 촉구 서명



수협법 개정을 위해 수산단체장들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 138만 수산산업인을 대표하는 한국수산업총연합회가 국회에 수협법 개정을 요구하는 촉구문을 채택하고 전국 수산산업인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첫 서명을 시작한 김임권 한수총 회장과 임원진들은 "수산금융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수협중앙회가 수산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수협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중앙회뿐 아니라 수산산업과 어촌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수산물질병관리사 면허시험 2월27일 시행

해양수산부는 제13회 수산물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2월27일 부산 영도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한다.

수산물질병관리사란 어패류 등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전문가로 200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수산물질병관리사는 수산물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담당한다. 합격자 발표는 3월3일 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2월의 웰빙 수산물 '복어, 김'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수산물 인터넷수산물시장(www.fishsale.co.kr)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2월의 제철 웰빙 수산물로 복어와 김을 선정, 발표했다. 이 두 품목은 2월 한 달 동안 10~20% 저렴하게 판매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홈페이지(www.mof.go.kr)를 통해 복어와 김의 영양과 요리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오징어·꽃게·참조기 추가  
표지판 대폭 키우고 게시위치도 구체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시범업소	
품명	원산지
참돔	국산
조피볼락(우럭)	국산
넙치(광어)	국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이 종전 9개 품목에서 12개로 늘어났다.

오징어와 꽃게, 참조기도 식품접객업소 등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은 종전 9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뽕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에서 모두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3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들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요리한 음식은 조리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표지판의 크기를 종전 'A4 크기(21×29cm) 이상'에서 2배 정도인 'A3 크기(29×42cm) 이상'으로, 표기하는 글자 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표지판의 게시(부착) 위치도 기존에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보다 구체화,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로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각 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했으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미표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